

국채 발행없이 26조 투입...李, '경제 희생 골든타임' 강조

대통령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

고유가 부담 완화 10조·민생 2.8조
산업현장 피해 최소화 2.6조 등 편성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마련된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시정연설에 나와 “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경제 희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시정연설에는 ‘위기’라는 단어가 23번 등장했다. 그만큼 중동 전쟁의 여파를 엄중하게 여긴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위기로 꼭 필요한 곳에 과감히 투자하면서도, 그 부담이 우리 국민과 경제에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했다”며 “특히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유가 부담 완화 10조원 ▲민생안정 대책 2조8000억원 ▲산업현장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조6000억원 ▲지방 투자지원 9조5000억원 등 분야별 구체적인 추경 편성 내역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고유가 부담 완화에 대해선 “석유 최고가격제의 원활한 운영

에 필요한 자원과 환율, 유류비 변동 대응을 위해 목적예비비로 5조원을 반영했다”고 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선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기본 10만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역화폐로 차등 지원하겠다”며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고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또 민생안정 대책과 관련해서는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 300개소 확대, 소상공인 정책자금 추가 공급, 기업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설명했다. 청년층을 위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취업·창업 지원 ‘K-뉴딜 아카데미’ 신설도 여기에 포함된다.

산업 피해 최소화과 공급망 안정에는 2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이 대통령은 “수출 바우처 지원 대상을 두 배 수준인 1만4000개사로 확대하고, 수출 정책금융 7조1000억원, 관광업계 저금리 자금 2800억원을 추가 공급해 기업의 자금 경색을 방지하겠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이번 에너지 위기를 계기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전환도 가속화한다.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용자, 보조를 역대 최대인 1조1000억원까지 확대하고, 마을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와 운영에 참여하는 햇빛 소득마을을 약 150개소에서 700개소까지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석유 화학산업의 나프타 수급과 석유비축 지원을 늘려 공급망을 안정화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위기에 대해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와 같다. 그래서 더욱 위기”라면서 “내일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파괴된 중동의 에너지 인프라 시설이 복구되고 이전과 같은 원활한 수급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기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만큼, 긴 안목과 호흡으로 지금의 위기를 넘고 내일을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위기 극복을 위한 이번 추경안 처리에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달라”며 “이번 추경안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이라고 했다.

이어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고 경제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아 우리 경제를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며 “국가적 위기 앞에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한 총정으로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가 손을 맞잡고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한-프 140년 우정 넘어 전략적 조율로”

이 대통령,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방한 맞아 일간지 르 피가로 기고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방한을 맞아 “점점 분열되고 불확실해지는 국제 환경 속에서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 간 파트너십은 전략적으로 필수적 요소”라며 “오늘날 양국의 협력은 보다 심화한 전략적 조율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에 쓴 ‘가치와 문화의 공유: 140년의 한-프 우정’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프랑스와 한국의 우정은 단순히 기념해야 할 유산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심화시켜야 할 파트너십”이라고 했다.

이날 한국을 찾는 마크롱 대통령의 국민 방한에 맞춰 투고한 글에서 이 대

통령은 1886년 조불수호통상조약 체결 이후 140년간의 한-프 관계에 대해 “외교, 산업, 기술, 문화 교류를 아우르는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의 신뢰는 공동의 가치 위에 세워졌고, 전략적 협력을 통해 강화됐으며, 국민 간의 일상적인 교류 속에서 더 풍성해지고 있다”면서 명동성당에 남아 있는 지식과 신앙 교류의 역사, 독립운동가들의 파리 활동, 프랑스군의 6·25 참전을 거쳐 프랑스 테제베(TGV) 기술에 기반을 둔 한국의 KTX 고속철도망, 원자력 협력 등 구체적 사례를 언급했다.

특히 양국 사회를 연결시켜주는 것은 ‘민주주의’ 가치라면서 “한국의 지적·정치적 전통은 장 자크 루소와 몽테스키외 같은 사상가들의 영향을 받아왔고, 자유와 권력 분립에 대한 이들의 사유

는 현대 민주주의의 제도 형성에 기여했다”고 짚었다.

이어 “프랑스 혁명에서 비롯된 국민 주권의 이상은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 속에 강력한 울림을 만들어냈고, 최근 평화적 ‘빛의 혁명’에서도 국민의 주권이 재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제환경이 불안정한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양국 협력이 심화돼야 한다면서 경제 안보와 장기적 안정성을 고려한 인공지능(AI), 원자력, 수소 기술, 우주 산업 등 핵심 분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정학적 차원에서도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프랑스의 관여, 한반도에서의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언급하며 이를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 역할”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불확실성의 세계에서 양 국가의 힘은 과거의 모습을 넘어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엑스포 센터 양자회담장에서 한-프랑스 정상회담을 하는 모습. /뉴시스

의 모습을 선택하는 데, 그리고 보다 안정적인 국제질서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지 결정하는 데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프랑스가 주요 7개국(G7) 의장국을 수임하는 데 대해서는 “문화강국 프랑스가 국제질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나라라는 사실이 한국 국민에게 더 많이 알려질 수 있길 소망한다”고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부터 이틀 간

국민 방문한다. 마크롱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2017년 취임 후 처음이며, 프랑스 대통령으로서 11년 만에 이루어지는 국민 방문이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을 찾은 첫 번째 유럽 정상이다.

이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오는 3일 정상회담을 갖고, AI·퀀텀·우주·원자력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서예진 기자

‘유력 후보’ 김관영 제명에 전북 선거관 요동... 무소속 출마 고심

민주당, 돈봉투 의혹에 金 제명 당내 경선, 안호영·이원택 2파전

더불어민주당 유력 전북지사 후보였던 김관영 현 도지사가 ‘돈봉투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되면서 선거관이 예상 밖의 상황으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기존 3파전이었던 민주당 경선은 안호영·이원택 의원 2파전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김 지사가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구도가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강준현 수석대

변인은 전날(1일) 국회에서 심야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금품 제공 파악이 돼 김 지사에 대해 최고위원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도내 한 식당에서 현직 시·군의원 등 20여 명에게 현금을 건넸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됐다.

강 대변인은 “사안을 접수하고 당대표가 즉시 감찰 지시를 했고, 윤리감찰단은 당사자로부터 소명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문답 결

과 (김 지사가) 금품 제공 혐의를 부인하지 못했다”며 “명백한 불법 상황이라는 것을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김 지사는 그간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었다. 하지만 제명되면서 민주당 소속으로는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됐다. 당내 경선은 안호영·이원택 의원 2파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불출마를 할 것으로 예상됐던 안호영 의원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사임계를 제출하고 경선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25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청 기자회견장에서 조선산업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완주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경북지사 경선은 오는 8~10일이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전에서 김 지사와 전날 통화했다면서 “정책연대를 바탕으로 도정 안정성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가 남긴 성과와 경험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전북 도정의 자산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정책 연대를 바탕으로 도정의 안정성을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무소속 출마를 고심하는 모습이다. 그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상상하지 못했던 제명 결정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큰 상처와 아픔 속에서도 저는 흔들림 없이 도정에 집중할 것이다. 차분히 길을 찾겠다”고 적었다. /서예진 기자